

‘혁신적 포용’ 지방국가로서의 호남의 선택

아침시평



윤성석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 왜 오랜 시일동안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애간장을 타게 만들었던 광주형 일자리 문제의 타결이 문재인표 국정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론과 연결되어 있을까? 마침 지난 1월 10일 신년 연두회견에서도 문대통령은 기해년의 국정목표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축으로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남북협력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건설, 그리고 국내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 이러한 국내외적 포용정책을 견인할 혁신성장 등의 정책 내용이 공표되었다. 흥미롭게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협력의 경제적인 파장(국내경제)에 대한 정책적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국내로 확산되어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의 신장, 그리고 새로운 성장산업의 도약으로 지속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바야흐로 ‘국제-국내 연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똑같이

글로벌 전략을 수행한다. 기해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호남의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론에 부합하는 지방정치와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 호남특색의 ‘혁신적 포용’ 지방정부의 특징과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호남의 매력지방국가(Charming Local State)의 구축을 위한 단계장과 지역민의 의지이다. 21세기에 문화외교는 제4의 외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호남을 매력적인 교류와 투자지로 홍보하기 위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개인과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국제적 활동에 나서 지역의 이미지 고양에 힘써야 될 것이다. 프랑스는 루이 14세부터 프랑스 언어, 문화, 철학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올리는 외교에 적극 임하여 국력을 증진시켰다. 호남은 혁신성장을 추동할 지역적 특성과 경제 지리적 환경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 즐비하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노무현의 햇볕정책기간에 남북교류사업이 진척이 되어 남북협력기금도 확충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남북협력사업에 뛰어 들었으나 여러 종류의 시행착오를 거쳤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대북사업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지자체는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회적으로 대북교류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남북한 대화가 중단되면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만일 2월말에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협의를 마치고, 북한의 FFVD와 미국의 상용조치(일부 유엔제재의 해제)가 박달에 이른다면 경색된 남북교류사업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는 대북교류사업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단이 많은 법이다.

호남은 남북협력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협소한 정치적 의도를 뛰어넘어 민간단체의 공공외교의 경로와 수준을 상향시켜서 호남 매력정부의 독특한 남북협력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한국의 국내문제와 호남 지역문제와의 연계이다.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관하여 울산형과 광주형으로 대비되는 논쟁이 그것이다. 울산형 발전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의 약화와 라이벌(중국 등)의 추격으로 말미암아 점점 존재기반을 상실해가는 상황에서 광주형은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경제적 패러다임 시각으로만 노사협상을 접근했기에 쌍방간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정치학적 해법의 동원으로 1월 31일에 역사적인 첫걸음을 땀 것이다. 호남은 다른 지역보다 평등과 정의가 넘치는 주민문화의 소재지이다. 평등 지향적인 주민통합의 문화가 작동하였기에 광주형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광주형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후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지역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 미래의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남의 지자체는 약자에 대한 복지와 인권정책을 각 지자체의 행정의 우선순위에 두어 팍팍한 행정논리를 뛰어넘는 매력적인 지방정부로 1년 농사를 잘 마무리 짓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교류 활성화시켜야 한다

기고



송형택 언론인

우리나라에 아라비아인들이 왔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고려사에 있다. 현종 15년(1024) 9월에 아라비아 상인 100인이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당시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경기도 예성강 하류의 벽란도였다. 이곳은 중국을 비롯하여 서양과의 교역이 이루어진 항구로 코리아란 이름이 서양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 함평에서 서역인의 얼굴이 새겨진 토기 한 점이 발굴되었다. 이 토기는 다른 지역에서 흘러온 것이 아니고, 서남해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토기류로 제작연대는 6세기로 추정되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의 아라비아 상인보다 400~5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와 아라비아상인간의 교역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신라 장보고의 완도 청해진 해상무역을 보더라도 당시 우리나라가 중국을 거쳐 서양을 잇는 해양실크로드의 동쪽 거점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토록 우리나라 국제교류의 역사는 그 뿌리가 깊다. 그리고 함평에서 발굴된 서역인의 얼굴이 그려진 토기는 그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유물인 것이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정종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19년도 국제교류활성화 시행계획(안)’을 내 놓았다. 이는 지구촌시대에 맞추어 국제교류를 선도하는 시의적절 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우리 광주의 국제화 수준 종합지표를 보면 서울 및 6대광역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의 국제화 수준을 가능하는 경제력부진이 서울 및 6대 광역시 가운데 7위, 재정력부문 7위, 사회문화기반부문

1위, 국제교류기반부문 6위로 종합지표 순위 6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제교류 및 국제화 수준을 확대향하며 문화예술 및 스포츠 영역의 국제 교류를 확대 향상하는 정책에 집중해야겠다.

또한 광주광역시 국제 교류현황을 보면 2017년 9월 기준으로 4개국 6개 도시와 자매결연, 9개국 16개 도시와 우호협력체결, 12개국 18개 도시와 교류 MOU체결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유럽·미국은 소수에 불과하며 남미·오세아니아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명실공히 지구촌시대의 국제교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할까?

첫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국제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가 곧 국제교류시대의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지구촌시민의식을 함양 시켜야겠다. 구체적으로 기초질서준수, 집주변 청결, 외국인 응대 시 친절할 말투와 표정, 생활외국어 익히기 등이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교류시대에 걸 맞는 준비, 환경과 시설을 갖추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화 기반시설 및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시스템 구축과 외국인 주거편의 향상 및 다문화사회의 기반 조성, 외국어 안내관, 대중교통이용 시설 등 우리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불편 없이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 도우미 정책을 마련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민과 광주시가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해야 한다. 아무튼 다가오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멋지게 치러내고 이를 계기로 특별한 우리 광주의 국제교류는 더욱 활성화 되어야만 할 것이다.

발언대

애물단지로 전락한 과속방지턱 오히려 사고위험 키운다

과속방지턱은 과속이 예상되는곳에 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문 설치업체에서 규격에 맞게 설치되는 안전시설물 이지만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도 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규격에도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오히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

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차량 속도를 늦추기 위해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맘은 이해하나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에게 화만 불러올 뿐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규격도 제각각인데다 형태마저 달라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기 쉬워 식별자체가 곤란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도로 한쪽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피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오가며 곡예운전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렇듯 과속방지턱이 애물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과속방지턱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은 주민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장치인만큼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도로관리청 등에 설치를 요청하여 적정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김덕형 (광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사설

5·18 능멸한 한중 세력들의 저의는 무엇인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공청회에서 배설에 가까운 막말들이 판을 쳤다. 말이 공청회지, 지난 수십년간 5·18을 왜곡·날조해온 수구적 극우 인사와 그들의 호의를 사려는 한중세력들에게 막말 잔치의 명석을 깔아 주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등이 주도한 지난 8일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온 극우논객 지만원씨는 사법부가 명확히 민·형사상 유죄로 판단한 예의 “5·18은 폭동, 북한군이 개입한 게릴라전”, “광주는 북한 앞마당”이라는 왜곡과 날조를 되풀이했다. 지씨는 또 “전두환은 영웅”이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잇단 극우적 인사로 변변히 사법적 심판을 받아온 지씨가 다시 또 가당찮은 망언을 일삼았다.

더욱 가관은 지씨를 발제자로 내세워 이같은 공청회를 주최한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들이다. 김 의원은 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된다.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이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 힘을 모아서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 원내대변인인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란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갖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는 5·18 유공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했다.

전두환씨가 내란죄의 수괴였음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파국으로 끝난 유신 독재 이후 권력 공백기를 틈타 불의의 군부 세력들을 규합, 헌정 질서를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짓값을 사법부는 엄중히 물었다. 5·18은 전씨가 자신의 부당한 권력유지를 위해 자국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데 대한 저항이었음도 역사가 증언하는 바다.

그럼에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백주 대낮에 이런 망언들을 쏟아낸 지씨와 김의원 등은 과연 정정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이들 한중 세력에게 명석을 깔아준 한국당 지도부에 어떤 저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은 한국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김의원 등의 출당조치 및 당 차원의 사죄 촉구와 국회 윤리위 제소, 의원직 제명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사회의 분노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례적으로 규탄 성명서를 냈다. ‘불의에 분노하지 않으면 그에 동조하는 것이다’고 했다.

광주가 낳은 진정한 의료인 윤한덕을 기린다

어두운 세상에도 한줄기 빛과 같은 인물은 있다. 10일 영면에 들어간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이 그런 인물이다. 광주가 낳은 참 의료인이라 할 그는 수많은 이들의 애도를 뒤로 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으로 남게 됐다. 그가 살아 생전 보인 선행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구현한 히포크라테스 정신에서 비롯됐을 터다. 의사 생활 25년에 가족에게 남긴 것은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지만 그의 정신은 참의료인으로 기억될만 하다. 편한 자리를 마다하고 어려운 일을 떠맡았던 그를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리워 할 것이다.

윤 센터장은 4명 낳기한 사무실에서 우리나라 응급체계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우리의 응급체계를 이 정도로 유지시킨 것도 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국 50개 응급의료 기관 역할과 국립의료 전산망 구축,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등 어려운 일을 맡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 응급의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다는게 의료계의 평가다.

그런 윤 센터장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는 것은 지역적 손실을 넘어 국가적 자산을 잃어 버린 손실에 다름없다. 이국중 아주대 교수가

남김 말처럼 “한쪽 어깨쪽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 설 전날인 지난 4일 과로로 쓰러져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윤센터장은 생전에 “응급 환자를 행복하게 하고, 응급실 의사를 좀 더 편하게 했으면 한다”는 소망을 표적했다. 이제 그의 꿈을 실현시킬 무가 우리에게 남겨 졌다.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및 보건 당국자들은 그가 평생 이루려고 했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남을 돕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이는 가뭇에 콩 나듯 하다. 그런 가운데 자신도 어렵지만 남을 위해 몸을 던지는 의인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훈훈해진다. 그들의 숭고한 마음과 행동이 각박한 세상을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시키는 밑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3만불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지도층의 비리가 심심찮게 드러나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윤 센터장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참 의료인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더 귀한 존재로 다가온다. 광주가 낳고 전남대가 교육 시킨 윤한덕을 오래 오래 기억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나라가 그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귀감으로 삼는 작업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훈장(勳章)

훈장은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수여하는 기장(記章)을 말한다. 포장(褒章) 또한 나라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주어진다. 훈장 다음 가는 훈격(勳格)으로 가슴에 다는 휘장이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의병과 독립운동, 광복에 참여한 우리의 순국선열들이 적지않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길에 뛰어들어 활동했는가 하면 가산을 털어 이들 활동가들을 도왔던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현대를 들어서도 수많은 사건·사고와 관련 해 위기에 처한 나라와 사회를 정상화시키고자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의료인 행위·행동들은 이어졌다.

나라는 그로 인해 희생되고 다진 이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해 왔다. 훈장제도는 1900년 「훈장조례」(칙령)를 공포하면서 시행됐다. 당시 훈장은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무등급), 이화대훈장(梨花大勳章·무등급), 태극장(太極章·8등급), 자웅장(紫鷹章·8등급) 등 4종이었다. 그러다 팔괘장(八卦章·8등급),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무등급), 서봉장(瑞鳳章·8등급)이 추가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1949.4.27), ‘무궁화대훈장령’(1950.10.19), ‘문화훈장령’(1951.12.22) 등을 종류별로 공포·시행했다. 제3공화국 때 각종 훈장령과 포장령을 통합한 ‘상훈법’

(1963.12.14)이 마련됐다. 이 법에 근거해 무궁화대훈장(무등급), 건국공로훈장(중장·부장·단장·3등급), 무궁화장(태극·울지·총무·화랑·인현 5등급), 소성훈장(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5등급), 근로공로훈장, 수교훈장, 문화훈장(대한민국장·대통령장·국민장 3등급), 산업훈장(금탑·은탑·동탑 3등급) 등 8종이 있었다.

상훈법은 그 뒤 몇차례의 개정(1967.1.16, 1970.11.17, 1973.1.25, 1988.8.5)을 거쳐 훈장의 명칭을 일부 바꾸거나 등급 추가 등의 조정이 이뤄졌다. 훈장의 서훈 기준은 통상적으로 그 대상자가 국가와 사회에 미친 공적 내용 및 효과의 정도와 지위, 기타 사항 등을 참작해 결정된다.

대체적으로 훈포장은 그 기여한 바에 따라 수여되지만 과거 독재 등 불의한 정권 시절, 국가와 사회에 큰 해를 끼쳤음에도 남용된 경우가 있었다. 80년 5월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일파에게 서훈된 훈포장이 대표적이다. 그들의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있는 터다.

올해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1902-1920)의 독립운동 유공 서훈이 3등급(건국훈장 독립장)이라 해서 논란이 많다. 친일반민족행위가 인정돼 서훈을 박탈당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가 2등급에 추서됐던 점과 비교된다. 상훈법 개정 등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서훈의 등급이 아닐 수 없다.

김영태 주필kymtd8617@naver.com



약수터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지)

회장 조덕선 사장 발행·편집인 장인균 주필 김영태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계봉로 324(충효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대표전화 (062) 606-7700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사인부 (062)606-7762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50 정취부 (062)606-7722 경제부 (062)606-7713 사회부 (062)606-7730 지역사회부 (062)606-7723
문화체육부 (062)606-7737 사진부 (062)606-7762 뉴미디어부 (062)606-7760 서울지사 (02)313-1681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0원 | 독자재보 062-606-7730·FAX 062-606-8765 | E-mail mdi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i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ilbo7700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사랑방 뉴스룸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